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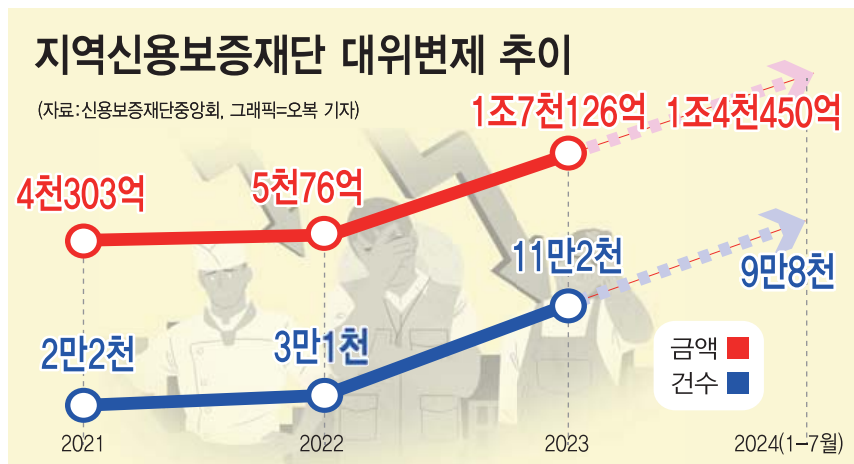
'3高'로 빛 못 끄는 소상공인 많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60% ↑ ...고금리로 부담 가중 광주 72.5%·전남 52.8%...세종은 4배 늘어 1위 양부남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수단 검토해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해 은행 빚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사진)이 2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



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



06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경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천건에서 2022년 3만1천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천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세종 4배(18억원→74억원), 강원 2배(256억원→567억원), 충북 94.8%(175억원→341억원), 경기 94.6%(1천667억원→3천245억원), 부산 77.1%(626억원→1천109억원), 인천 74%(548억원→954억원), 광주 72.5%(211억원→364억원)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전남은 52.8%(212억원→324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었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기초단체장도 '문화마을' 지정 가능해진다

정준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문화마을'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사진)은 24일 "광역단체장에게만 있던 '문화지구' 지정권을 '문화마을'로 줄여 기초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일명 문화마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단위를 '문화마을'로 지정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 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문화도시'나 '문화지구'의 경우 실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곳을 지정했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익산시의 보석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보물찾기' 축제 ▲공주시의 '공주 그림상점' 등 소규모 공간 3곳(6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바이마을, 벽화마을 등 수많은 마을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추세에 맞춰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 정의하고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 많이 발견하게 됐고 이런 곳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으로 무등산 야구용품 마을이나 말바우시장 마을같이 작지만 고유한 문화를 지닌 마을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금투세' 놓고 갑론을박

"유예해 증시 부양" vs "시행해 시장 투명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

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계"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재보선 앞...민주-혁신 신경전

내달 16일로 예정된 기초단체장 재보선거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단체장을 뽑는 네 곳 중 아련의 텃밭인 호남 두 곳(영광군·곡성군)을 놓고 양측이 양보 없는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KB S라디오에 출연, "(혁신당은)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는 자신의 비판에 혁신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고인 물은 썩는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혁신당에서 먼저 네거티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조 대표 등이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불참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는 당이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은 비교집단체여서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열지 알기 어렵고, 이에 맞춰 언제 지방일정을 잡을지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법 표결 때도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지방 일정을 잡았다.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PHOENIX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PHOENIX K-06
중상급자용

PHOENIX K-03
초보 중급자용

PHOENIX G-01
초보 입문자용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